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0년도 제17차 회의

1. 일 자 2010년 8월 31일 (화)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재)
김 대 식 위 원
강 명 현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최 도 성 위 원
5. 참 여 자 임 종 룹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 태 혁 감 사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박 원 식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김 종 화 국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용 회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31호 — 「통화안정계정규정」 전부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통화안정계정의 운용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강제예치방식으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통화안정계정이 통안증권, RP 등 기존의 정책수단과 경합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통화안정계정은 주로 28일 이하 만기의 통안증권을 대체하여 운용할 예정이므로 정책수단간 경합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의 양도를 허용할 계획인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의 양도를 허용하면 예치금의 소유권 이전문제가 얹히게 되어 유동성관리 절차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당행의 유동성조절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 예치금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화안정계정거래 약정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통화안정계정을 강제예치방식으로 운용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사전준비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를 「통화안정계정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통화안정계정을 강제예치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강제예치의 목적, 시급성, 규모 등 사안에 따라 금융기관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기간이 다를 것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에 명시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며, 실제 운용시에는 사안별로 사전준비기간을 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통화안정계정 대상기관을 RP매매 대상기관으로 한정할 이유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한국은행법」상 통화안정계정에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통화안정계정 경쟁입찰방식이 만기 및 기능면에서 단기유동성을 조절하는 RP매각방식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상기관을 은행중 RP매매 대상기관으로 한정하였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경쟁입찰방식의 통화안정계정도 일상적 유동성 조절을 위해 활용되는 만큼 통안증권과 마찬가지로 분기별 한도를 설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통화안정계정은 최장 만기가 91일물이고 주로 28일 이하의 단기 유동성조절에 활용될 예정인데 이 경우 분기중에 예치금의 입금과 지급이 수시로 이루어져 분기 말일에 잔액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분기

말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답변하고, 다만 매분기 통안증권 발행한도 설정시 통화안정계정 운용 가능규모 추정치를 금통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통화안정계정규정」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통화안정계정규정」 전부개정(안)(생략)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또는 2010년 9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 참조)

〈정부측 열석자 발언〉

의장은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정부측 열석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차관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대책 및 세제개편안, 서민물가 및 추석민생 안정대책을 간략히 소개하였음